

---

# 지역과 상생하는 금강하구 해수유통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 목 차

I. 총 평 ..... 1

II. 주요 토론내용 ..... 2

    ① 주제발표 ..... 2

    ② 지정토론[4인] ..... 5

    ③ 청중토론 ..... 8

    ④ 정리발언 ..... 9

III. 토론회 도출 과제 및 결론 ..... 10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11

## [ 참 고 ]

□ 토론회 사진 ..... 12

□ 언론보도 ..... 13

# 지역과 상생하는 금강하구 해수유통 의 정 토 론 회 개 최 결 과

❖ 금강하구 해수유통 추진에 따른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폭넓게 논의하고, 지역주민·전문가·행정이 함께 정책적 논의의 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지역 상생발전방안을 마련

⇒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금강하구 해수유통 및 지역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함

##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5. 12. 5.(금), 14:00~16:10 / 논산시 강경읍사무소 강당
- 참 석 : 120여 명(의원,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등)
- 주 제 : 금강하구 생태복원 총남의 정책방향과 과제  
※ 좌장: 오인환 의원

## I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도민 등 120여 명이 참여하여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생태복원을 위해 정책적·산업적 전략 모색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 금강하굿둑 설치 이후 수질 악화와 기수역 소멸, 회귀성 어종 감소, 항만 기능 저하 등 누적된 생태적 문제를 명확하게 공유함으로써,
  - 금강 유역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재확인하고, 농업·공업용수 확보라는 물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 수자원 확보와 염분 관리 기술, 작물 전환, 단계적인 해수유통 등 현실적인 대안들이 다각도로 제시되었음.
  - 특히,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이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된 만큼, 특별법 제정에 관한 논의와 함께 연구용역 추진 등 제도적·정책적 여건이 이전보다 진전된 시점에서 열린 토론회라는 점에 있어, 향후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정기적인 논의와 피드백을 통해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자 함.

## II 주 요 내 용

### 1 주제발표: 충남연구원 김영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

- 하구 개방에 따른 최대 걸림돌은 농업·공업용수 취수 문제이며, 해수유입으로 인한 기존 취수장의 농업·공업용수 확보가 어려워짐.
- 하굿둑 상류 10km 구간의 주요 취수장 4곳 중 약 80%가 전라북도에서 사용되고 있고, 20%는 서천 화양양수장에서 사용되고 있어 용수 대안 확보 없이 하구 개방은 사실상 불가능함.

- 하굿둑 설치로 인해 1990년대 3등급인 수질은 현재는 평균 4~5등급 수준으로 하락되었으며, 보 개방에 따라 상류 녹조는 사라졌지만, 하구는 오염물이 밀려와 매년 녹조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녹조의 독소 농도는 국제 기준을 자주 초과하고 있음.
- 현재 금강 하굿둑의 수문 20개는 군산 방향에만 몰려 있어 물 흐름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어 군산 측은 모래 퇴적, 서천·장항 측은 펄이 퇴적되고 있어 오염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장항 앞바다는 지속적인 퇴적으로 준설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항 기능은 저하된 상황임.
- 아울러, 하굿둑 설치로 인해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이 소멸되어 생태계가 단절되고 있으며, 웅어·송어·삼세기 등 전통적 기수역 어종이 사라졌고, 서천의 김 양식장 황백화 현상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됨.
-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하구 복원의 흐름이 확대되고 있고, 국내 마리나·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금강 하구는 충남·전북·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충남은 해수순환과 생태복원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전북은 농업용수 확보 없이는 개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이 포함되었는데, 용수 확보를 위한 대안 연구 등 과거 보다 진전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도에서 주도적으로 관련 부서들이 TF를 구성하고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임.

## 2 지정토론(4인)

### ① 한병수 원장 (강경역사문화연구원)

- 금강유역을 토대로 함께 성장해 온 강경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금강하구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함.
- 1899년 군산항 개항 이후 금강 수운을 기반으로 전국 3대 시장으로 성장한 강경은 상업·유통의 중심지였으며, 서해 수산물과 소금, 내륙의 농산물과 생필품이 집산되고 유통되던 핵심 거점이었음.
- 그러나 호남선 개통과 육상교통 발달, 특히 1990년 금강하굿둑 설치 이후 수운이 단절되면서 강경은 급격한 쇠퇴를 맞이했고, 어업·상업·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붕괴되었음.
- 게다가 해수유통 차단 이후 어종의 감소(재첩·참게 등 소멸), 수질 악화와 토사·쓰레기의 적체, 홍수 시 배수 문제 등 생태계 전반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함.
- 하굿둑 설치 이전 풍부한 어족 자원으로 다수의 어가가 생계를 유지해왔지만, 현재 강경의 어업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로 환경의 문제를 넘어 지역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함.
- 그간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생태복원 논의와 연구가 이어졌음에도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으며, 농업용수 문제 등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은 현재의 기술과 대체 수자원 활용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지역 간 협의와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수유통 및 금강 생태복원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② 이상진 명예연구위원 (충남연구원)

- 하구 복원의 개념은 하굿둑이나 갑문을 철거하는 개념이 아닌, 기존 시설을 유지하면서 생태 기능을 회복하는 생태적 복원이라는 점을 강조함.
- 바닷물을 제한적으로 유입시켜 기수역을 회복하고 회유성 어종 이동과 수질 개선을 유도하여 어업·관광·지역경제 전반에 이익을 창출하자는 취지로 특히 충남 금강하구 연안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함.
- 다만, 농업 분야는 일정부분의 이해와 조정이 필요하며, 사회적 이익 재분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함.
- 바닷물의 염도(PPM)를 고려할 때, 농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수를 혼합하는 것은 가능하며, 계절적 생태복원 방식으로 5월에서 9월 사이 제한적 해수유통을 시도하고, 상류에서 유입되는 담수량만큼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수질 개선과 어종 회복, 녹조 완화와 김 양식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아울러,물관리기본법의 유역관리 원칙을 토대로 농업용수 문제는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물을 활용하거나 재이용의 확대, 기존 관망 활용을 통해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염분 유입은 일부작물(마늘·양파 등)의 경우에는 병해충 저항성과 생육에 도움이 되어 갯벌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 구조 전환도 검토될 수 있음.

- 끝으로, 생태복원은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추진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현재 수자원 기능의 환경부 일원화와 국정과제 채택으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만큼,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병행하여 지역 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함.

### ③ 강정현 대표 (가나안수산)

- 내수면어업은 하천·댐·호수·저수지 및 기수역을 포함하는 수역을 중심으로, 해수면 대비 생산량 비중은 1.1%에 불과하지만, 생산금액은 6.7%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
- 그러나 금강 하굿둑으로 인한 회귀성 어종의 단절과 하구 생태계 변화로 장어·황복 등 주요 경제어종이 급감하며, 금강하구 일대 내수면 어업은 사실상 붕괴된 상황임.
- 해수유통을 통해 어로어업 어업권 회복과 내륙어촌 재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강경·논산 지역에 새로운 산업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특히, 종어·황복·뱀장어 등을 중심으로 첨단 고부가가치 양식 단지 조성 및 관광·축제 등 6차 산업과 연계한 내수면 산업의 확장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함.
- 금강하구 해수유통은 생태 복원을 넘어 내수면 수산업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강경·논산의 지속가능한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함.

#### ④ 공상현 과장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 금강 하굿둑은 1990년대 준공 이후 농업·공업용수 공급 등 순기능을 수행했지만, 장기간 운영 과정에서 수질 악화 및 수생태 단절 문제가 누적되었고, 하구 생태계가 크게 훼손되었음.
- 이에 충남도는 국회 및 타 시·도와 협력하며 하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최근 하구 복원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을 추진 중임.
- 도 차원에서는 생태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전면 개방보다 단계적 개방을 통한 접근이며, 전면 개방은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어업·농업·지역 생활 전반에 급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실증과 검증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약 12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고, 충남도는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협의할 계획임.
- 아울러, 금강하구 문제는 국가·지자체·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전북 등 인접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물 관리와 하구 생태복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③ 청중토론

- 해외, 특히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해수유통을 추진하는지 궁금하며, 특히 염분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염분 농도가 실제 농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함. (청중1\_김정현 귀농귀촌 회장)

- (답변\_김영일 연구소장)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염수를 활용한 농업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일부작물의 경우, 저농도 염분 (약 800ppm) 환경에서도 생육이 가능하고, 염분에 강한 작물과 품종개발은 이미 진행 중이며, 작물전환과 기술 개발을 통해 하구 수자원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음. 또한 해외에서도 다양한 해수유통 사례가 존재하며, 설득과 협의를 통해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하고 일부 구간에 해수유통을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 진행되었음.

#### **4 정리발언**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주신 소중한 의견 깊이 새기겠으며, 발제와 토론을 통해 충분한 쟁점과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특히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관련한 정책·제도·지역 현안에 걸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음.
- 이번 발제와 토론내용, 주민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부건의 및 관련 특별법 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법안 제정 이후에는 충청남도 차원의 조례 제정으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음.
- 아울러 오늘 논의된 바탕으로 금강하구 문제 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이어나가겠음.

[정리발언: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오인환 의원]

## 〈도출과제〉

1. 금강하구 해수유통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농업·공업용수 등 수자원 대체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를 위한 만경강·동진강 유역과의 연계, 수자원 재이용 확대, 기존 관망 활용 등 대책이 도출되었음.
2. 해수유통과 관련해서는 전면개방보다는 제한적·계절적 해수유통을 통한 실증적인 접근이 도출되었으며, 정책 신뢰도 확보를 위한 수질 개선, 녹조 완화, 기수역 회복 효과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데 의견을 모았음.
3. 토론회 참석자 및 관계자들 역시 토론과정에서 도출된 법·제도적 기반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지역 갈등을 조정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 〈결 과〉

- 금강하구 해수유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과 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실증적인 접근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함.
  -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진행
  - 상생협의체 구축 및 소통채널 강화
  -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견 전달 및 협업체계 구축
  - 갈등 관리 및 이익 재분배 관점의 정책 설계

## IV

### 후속조치 (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 과제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붙임 : 1. 의정토론회 사진 1부.  
2. 언론 보도 내역 1부. 끝.



농수축산신문

HOME > 지역 > 충남

## 충남도의회, 금강하구 해수유통 해법 모색...“생태복원·지역상생 함께 가야”

A 박나라 기자 | © 승인 2025.12.08 18:11

논산 강경서 의정토론회 개최  
해수유통의 환경·경제·역사 가치 논의, 단계적 추진·안전대책도 강조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충남도의회가 금강하구 해수유통 추진을 둘러싼 환경·경제·사회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며 지속 가능한 해수유통과 지역 상생전략 마련을 위해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5일 논산시 강경읍사무소 강당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금강하구 해수유통 의정토론회'를 열고, 생태복원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토론회 좌장은 오인환 의원(민주당, 논산2)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김영일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이 진행했다.

김 소장은 금강하구의 현황과 하굿둑 건설 이후 심화된 수질·퇴적 변화, 생태계 훼손 문제를 짚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하구복원은 선택이 아닌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 "해수 유통 위해 '금강하구 복원 특별법' 필요"

▲ 노준희 기자 | © 승인 2025.12.05 15:40

김영일 소장 "해수 순환 통한 수질 및 생태복원 시급"  
한병수 원장 "금강 자연성 회복, 위축된 강경포구 역사·문화·경제 되찾아"  
이상진 명예연구위원 "거버넌스, 금강하구 복원의 성공조건"  
강정현 대표 "금강하구 복원 통해 내수면 어업 활성화"  
공상현 과장 "전북도와 협의 방안 도출 노력"



이재명 정부가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복원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최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5일 오후 2시 논산시 강경읍사무소 강당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금강하구 해수유통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노준희)

**[굿모닝충청 노준희 기자]** 이재명 정부가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복원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최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5일 오후 2시 논산시 강경읍사무소 강당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금강하구 해수유통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